

“5인 미만 확대 반대”... 소공연, 여야에 22대 정책과제 제안

고용·노동 정책 현실화 등 포함
‘지역별 민생현장 44대 과제’도 제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업계 숙원

소상공인연합회가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관련 ‘4대 아젠다·22대 핵심과제’를 내놨다.

여기에는 고용·노동 정책 현실화, 사회안전망 구축, 양극화 해소, 공정 생태계 관련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지역비자 제도 도입’ (경북도) 등 지역별 맞춤형 민생 현장 44대 과제도 제시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 과제”를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지역 과제 역시 각 당의 광역지사제 후보들이 결정되는대로 지역연합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철회 ▲최저임금 제도 개선 ▲주휴수당 폐지 ▲임금 근로시간 변화에 관한 소상공인 참여보장을 중심으로 한



송지영 소상공인연합회장(앞줄 왼쪽 5번째)이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서울지역연합회 현안 청취 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공연

고용·노동 현안들은 소상공인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과제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 소공연은 논의를 즉시 철회하고 현행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법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선고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한결같이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논의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선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중 소상공인 몫 2→4명 확대, 최저임금법에 ‘영세·취약사업장 소상공인 지불능력’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도 업계의 숙원이다. 이를 통해 의료, 학자금 등 생활안정 대책과 복지진흥기금 설치, 사회보험 특례 적용, 나아가 기본소득 보장 기반 마련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 복구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에 대해서도 모

두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22대 핵심 과제에는 ▲경영안정비우처 대상 및 금액 확대 ▲소상공인 전용 소액대출 상품 도입 ▲지역신보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균형 성장 추진 등 ‘양극화 해소’ 과제와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소상공인 단체고섭권·단결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공정 생태계’ 과제도 포함돼 있다.

지역 맞춤형 과제의 경우 소상공인

관련 특별지역비자 제도 도입, 생명안전망 3대 질병 보장제 도입 내용이 담긴 경북도 과제가 눈에 띈다.

경북지역 소상공인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도가 수요를 반영해 외국 인력을 추천하는 지역주도형 특별비자 트랙을 도입하고 법무부의 지역특화비자(F-2-R) 및 특정활동(E-7)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암·뇌혈관 질환·심장질환과 같은 3대 중증 질병 확진 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폐업을 예방하거나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소상공인 중 가장 많은 26.7% (약 210만개·2023년 기준)가 물려 있는 경기도의 경우 ▲소상공인 고경비 부담 완화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생활상권 중심 상권 회복 및 상시 관리체계 구축 ▲소상공인 고용·노동 부담 완화 지원 ▲공공소비·공공조달을 통한 소상공인 판로 확대 ▲소상공인 플랫폼 의존 완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재도전·업종전환 지원 체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예비후보가 22일 오전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해항에서 어구를 손질하며 어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뉴스1

김진태, 장동혁에 직격... “결자해지 필요”

“국힘, 중앙당 이슈로 어려움 겪어 지도부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국민의힘 강원지사 예비후보인 김진태 현 강원지사 22일 강원을 찾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옛날에 그 멋진 장동혁으로 좀 돌아가주셨으면 좋겠다.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장 대표는 “결자해지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지방선거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강원 양양수산물어촌마을회관에서 장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강원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원 일정은 장 대표의 방미 후 지역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첫 현장 행보였다.

김 지사는 “현장을 다녀보니 내가 원래 빨간당(국민의힘)이었는데, 이번에 중앙당을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를 안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처음에는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하고

열심히 뛰어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당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시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다”며 “강원도에는 우리 당 후보가 300명쯤 된다. 아마 이 후보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대표를 만나면 더 세계 얘기해달라는 후보들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하루 종일 발이 부르뜨도록 다녀봐야 중앙당 뉴스가 뜰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때가 많다”며 “당장이제 42일이면 생사가 결정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속이 탄다. 후보의 말은 좀 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김 지사의 발언 이후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강원도에 1시간대 교통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2028년 조기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춘천 연장, GTX-D 노선 원주 신설, 강원 내륙선과 태백 영동선 철도 고속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김용 리스크·송영길 복귀론... 與 공천 난제

이광재, 민주당 다크호스로 부상
부산 북갑 하정우 차출설 술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여전히 고심을 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 김용 전 민주당 연구원 부원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복잡해져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앞서 재보선 공천 방향성을 ‘전광석화’라고 표현하며 속도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이르면 이번주 내로 빠르게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김용 전 부원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보석 석방 후엔 안산갑·하남갑 등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거론하며 재보선 출마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당일각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중심으로는 재보선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이 정계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전반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로 출마를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에선 당 지도부가 김 전 부원장을 전략공천 대상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김 전 부원장 공천 문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의견이 좀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후보를 비롯한 당 최고위원들과 함께 경남 통영시 통영활어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며 민생 탐방을 하고 있다. /뉴스1

정 대표 역시 이날 경남 통영 옥지도에서 당포항으로 이동하는 여객선 내에서 열린 선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라며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이라고 발언했다. 정치권에선 해당 발언이 김 전 부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인천 계양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송영길 전 대표의 거취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곳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송 전 대표는 계양을에서 5선을 지냈다. 하지만 정 대표가 김 전 대변인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 연수갑이나 경기 하남갑에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수갑은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하남갑은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면서 공석이 될 예정이다. 다만 연수갑은 인천에 다른 지역에 비해 민주당세가 세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강성’ 이미지만 송 전 대표가 가는 것은 전략상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 때문에 송 전 대표가 하남갑에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이광재 전 지사라는 새로운 카드가 등장하면서 썬병이 복잡해졌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이광재 의원 같은 분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특히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런 곳에 출전해도 경쟁력이 매우 있다”고 말해 이광재 전 지사가 경기 하남갑 또는 평택을 두고 당과 조율이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또 다른 관심 지역 중 하나인 부산 북구갑 선거에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이후 하 수석이 출마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당내에선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1호 울산 남구갑 전대진 변호사에 이은 재보선 전략공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